

2021년도 경찰간부후보생(제70기) 공개경쟁선발시험

1 교 시

- 객 관 식 (공 통) -

목 차

【한 국 사】 (공통)	1
【형 법】 (공통)	7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대 학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우리나라에서 화석 인골이 출토된 구석기 유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덕천 승리산 동굴에서 용곡인이 출토되었다.
- ②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두루봉인이 출토되었다.
- ③ 평양 대현동 유적에서 역포인이 출토되었다.
- ④ 제천 점말 동굴에서 홍수아이가 출토되었다.

2. 다음 단군신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삼국사기」에는 ‘단군’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평양은 본디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라는 설명이 있다.
 나. 「삼국유사」의 찬자인 일연은 「위서」와 「고기」를 인용하였다.
 다. 이규보가 지은 「제왕운기」에도 단군신화가 실려 있다.
 라. 「세종실록지리지」, 「동국통감」에도 단군신화가 실려 있다.
 마. 단군기원은 「삼국유사」의 요임금 즉위 50년(기원전 2283년)을 따른 것이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마 ④ 라, 마

3. 다음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토지는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오곡이 잘 자라고 농사짓기에 적합하다. 혼인하는 풍속에 여자의 나이가 10세가 되기 전에 혼인 약속을 하고 신랑집에서는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는다.
 나. 대군장이 없고 후·읍·군·삼로의 관직이 있어서 하호를 통치하였다.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 「삼국지」위서동이전 -

- ① 가 -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 ② 나 -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 ③ 가 -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생산되었다.
- ④ 나 - 사람이 죽으면 옛집을 버리고 다시 새 집을 지어 산다.

4. 다음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에서 시기적으로 네 번째 순서에 해당하는 사건은?

가. 낙랑을 축출하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나. 위(魏)의 장수 관구검의 침공으로 환도성이 함락되었다.
 다. 왕이 직접 말갈 병사를 거느리고 요서지방을 공격하였다.
 라.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지역을 차지하고 북으로 숙신을 정복하였다.
 마. 전연 모용황의 침략으로 궁궐이 불타고 5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 ① 나 ② 다 ③ 라 ④ 마

5. 백제의 무덤 중 공주 송산리 6호분과 부여 능산리 1호분(동하총)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 ① 방이 여러 개인 다실묘이다.
- ② 봉토를 덮은 굴식돌방무덤이다.
- ③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이다.
- ④ 무덤방의 벽면에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

6. 다음 중 밑줄 친 ‘국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문수가 또 말하기를 “너희 국왕은 천축의 찰리종 왕으로 미리 불기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인연이 있어 동이 공공의 종족과는 같지 않다.”...(중략)... 신인이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여자가 왕이 되어 덕은 있으나 위엄은 없다. 그러므로 이웃나라가 꾀하는 것이다. 마땅히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였다. 자장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장차 무엇이 이익이 되겠는가”라고 물으니 신인이 “황룡사 호법룡은 나의 장자로 범왕의 명을 받아 그 절에 가서 호위하고 있으니 본국으로 귀국하여 절 안에 9층 탑을 조성하면 이웃나라가 항복하고 구한이 와서 조공하여 왕업이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 「삼국유사」 -

- ① 황룡사를 창건하였다.
- ② 당과 군사 동맹을 맺었다.
- ③ 향가를 수집하여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 ④ 인평(仁平)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7. 다음 보기의 시를 지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달 밝은 밤에 고향길을 바라보니
 뜬구름은 너울너울 고향으로 돌아가네
 그 편에 편지 한 장 부쳐보지만
 바람이 거세어 화답이 안들리는구나
 내 나라는 하늘 끝 북쪽에 있고
 지금 이 나라는 땅끝 서쪽에 있네
 일남(日南)에는 기러기마저 없으니
 누가 소식 전하러 계림으로 날아가리

- ① 화엄종을 개창하여 제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였다.
- ② 당나라 현장법사에게서 수학하고 유식론을 발전시켜 당나라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③ 당을 거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각 지역의 풍물을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지었다.
- ④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와의 사상적 대립을 완화하고자 화쟁 사상을 주장하였다.

8. 밑줄 친 ‘인물’과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김구해가 왕비와 세 아들과 함께 나라 창고의 보물을 가지고 투항하였다. 왕이 그를 예로 대우하여 상등의 위를 주고 본국을 식읍으로 삼게 했다. - 「삼국사기」 -

가. 중국 남조와 교류하였다.
 나. 진흥왕대에 신라로 병합되었다.
 다.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라. 이 나라의 지배층 무덤으로 지산동 고분군이 유명하다.
 마. 5세기 말에는 전라북도 일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다음 일본 정창원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촌락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토지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나. 촌주가 소유한 내시령답과 관모전답이 있었다.
 다. 촌주가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촌 단위로 매년 다시 작성하였다.
 라. 호구는 인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마. 사해점촌, 살하지촌 등 중원경 부근 4개 자연 촌락에 대한 조사이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나라의 불교 신앙을 보여주는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열국을 주관하고 여러 번을 거느리며,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너무 멀어 길이 막히고 바다 또한 아득히 멀어서 소식이 통하지 않고 길흉을 물음이 끊어졌습니다. 어진이와 가까이 하며 우호를 맺고 옛날의 예에 맞추어 사신을 보내어 이웃을 찾는 것이 오늘에야 비롯하게 되었습니다. - 「속일본기」 -

가. 동경 옛 터에서 이불병좌상이 출토되었다.
 나. 상경 옛 터에서 금동관음보살입상이 출토되었다.
 다. 중경 옛 터에서 6m가 넘는 거대한 석등이 출토되었다.
 라. 지린성 장백진에 고구려의 영향을 보여주는 벽돌로 만든 영광탑이 있다.
 마. 정혜공주 묘지문에서 부왕인 문왕을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 대왕’이라 칭하였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나, 마

11. 다음 보기의 (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오늘날 나라의 법이 무너져 나라의 토지와 약한 자들의 토지를 힘 있는 자들이 모두 빼앗고, 양민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은 병들고, 나라의 창고는 비어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가) 을(를) 만들고 이를 시정 하고자 하니...(중략)... 기한 내 시정 하는 자는 그냥 두겠으나, 기한 경과 후에 발각된 자는 처벌할 것이며, 거짓으로 보고한 자도 벌을 받을 것이다” - 「고려사」 -

- ① 교정도감 ② 도병마사
- ③ 식목도감 ④ 전민변정도감

12. 다음 고려 시대 군사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중앙군 2군은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 임무를 맡았다.
 나. 특수군인 광군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한 것이다.
 다. 중앙군 6위 가운데 금오위는 경찰, 천우위는 의장 임무를 맡았다.
 라. 5도의 주현군은 직업 군인으로 군인전을 지급받고 역을 자손에게 세습하였다.
 마. 양계의 주진군은 주·진에 주둔하면서 전투태세를 갖춘 상비적 전투 부대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다음 보기의 (가)에 해당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때 대사 중서령 최충이 후진을 모아 교육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니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그의 집과 마을에 가득했다. 마침내 9재로 나누어 ...(중략)... 그 후로부터는 무릇 과거에 나아가려는 이는 9재에 이름을 올리게 되니 이름하여 문헌공도라 했다. 또 유신으로서 도를 세운 이가 11인이 있다. - 「고려사」 -

가. 향리의 공복을 규격화하였다.
 나. 웅장한 규모의 홍왕사를 창건하였다.
 다. 사형수에 대해 삼심제를 실시하였다.
 라. 관학 진흥을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마.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하여 3경에 포함하였다.

- ① 가, 라 ② 나, 다 ③ 나, 마 ④ 다, 마

14. 고려 시대에 편찬된 역사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고금록 - 박인량이 편찬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나. 삼국사기 - 김부식이 주도한 관찬 사서로 기전체 서술방식이다.
 다. 해동고승전 - 각훈이 선종의 입장에서 불교사를 정리하였다.
 라. 동명왕편 - 이규보가 쓴 고구려 시조 동명왕을 찬양한 서사시이다.
 마. 본조편년강목 - 민지가 편찬한 고려의 역사서로 기사본말체 서술방식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을유에 왕이 개경을 출발하여 승천부에 이르고 병술에 강화의 객관에 들었다. 이때 장마가 열흘이나 계속되어 진흙길이 발목까지 빠져서 사람과 말이 쓰러졌다. 고관이나 양가의 부녀들로서 맨발로 엎고 이고 하는 자까지 있었다. 환과고독(鰥寡孤獨)으로서 갈 바를 잃고 소리 내어 슬피 우는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 「고려사절요」 -

- ① 고려 원종 재위시에 있었다.
- ② 당시는 최우가 실권을 장악한 무신집권기였다.
- ③ 몽고의 침략이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 ④ 강화는 39년 간 고려의 도읍지로 기능했다.

16. 원간섭기 고려에 전래된 원의 문화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족두리
- ② 언어 ‘○○치’
- ③ 음식 ‘소주’
- ④ 의복 ‘두루마기’

17. 다음 고려 시대 대외관계를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몽고가 고려를 침입하였다.
 나. 동북 9성을 여진에게 주었다.
 다. 강감찬이 귀주에서 크게 이겼다.
 라. 거란에서 보낸 낙타를 굶겨 죽였다.
 마.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하고 여진을 정벌하였다.

- ① 가-라-다-마-나 ② 나-마-라-다-가
- ③ 라-다-마-나-가 ④ 마-나-라-다-가

18. 다음 보기의 (가)에 들어갈 장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 온다
 을축 사월 갑자일에 (가) 을(를) 이룩하세
 도편수의 거동을 바라 먹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가) 중건에 다 들어간다

- ① 창덕궁 다음으로 창건되었다.
- ② 조선 후기에 법궁(정궁)으로 기능했다.
- ③ 궁궐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다.
- ④ 궁궐 동쪽에 사직단, 서쪽에 종묘가 배치되어 있다.

19. 조선 전기 문화·예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박한 맛을 보여 주는 청화백자가 제작되었다.
- ②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현재 일본 천리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 ③ 안평대군, 김정희 등 뛰어난 서예가들이 많이 나타났다.
- ④ 강희안의 고사관수도는 우리나라 산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20. 다음 보기의 (가), (나), (다)를 옳게 나열한 것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려면, 서울은 (가) 에 올리고 지방은 (나) 에 올린다. 그렇게 한 뒤에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다) 에 신고하고, 그러고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친다.
 - 「경국대전」 형전 -

- ① (가) 승정원 (나) 수령 (다) 홍문관
- ② (가) 의금부 (나) 수령 (다) 홍문관
- ③ (가) 주장관 (나) 관찰사 (다) 사헌부
- ④ (가) 의금부 (나) 관찰사 (다) 사헌부

21. 다음 조선 시대 무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포르투갈로부터 전래된 조총을 사용하였다.
- ② 비격진천뢰는 심지가 다 탔을 때 폭발하면서 내부의 방철을 사방에 뿌리는 무기였다.
- ③ 불랑기포는 16세기 중국에 전래된 청동제 포로 평양성 전투에서 사용되었다.
- ④ 선조 때 신기전이라는 화살을 발명하였는데, 사격 각도의 조절 범위가 커서 사거리를 최대한 연장할 수 있었다.

22. 다음 보기의 (가)에 해당하는 인물이 속한 정치 세력과 관계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은(는)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 시기 과거에 급제하였다. 성종 시기에 발탁되어 경연에 두어 오랫동안 시종의 자리에 있었다. 형조 판서에 이르러서는 은총이 온 조정을 기울게 하였다. 병으로 물러나게 되자 성종은 소재지 관리로 하여금 특별히 미곡을 내려 주도록 하였다. 지금 (가) 의 제자 김일손이 찬수한 사초에 부도한 말로써 선왕조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스승 (가) 의 ‘조의제문’을 실었도다.

- ① 향촌 자치를 강조하였다.
- ② 대체로 중소 지주 출신이 많다.
- ③ 정도전·조준 등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 ④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23. 다음 자료와 관련된 국왕이 행했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붕당의 폐해가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학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 소란스럽더니, 지금에는 한편 사람을 모조리 반역하는 당으로 몰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쓰는 방법이 넓지 못하는데, 요즈음은 모두 같은 당의 사람만 임용한다. 높고 낮은 관리들이 공격을 일삼고 싸움만 계속하고 있으니, 이러한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나의 말은 위로는 종사를 위하고 아래로는 조정을 진정시키려는 것이니 혹시 의심하거나 기회로 생각하여 상소를 올려 남을 모함한다면 종신토록 금고하여 내가 그들과는 나라를 함께 할 뜻이 없음을 보이겠다.

- ①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 ②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 ③ 이조전랑의 3사 관리 추천권을 없앴다.
- ④ 남인 계열 등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고루 등용하였다.

24. 다음 보기의 (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을(를) 팔아 진흙곡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하므로 쌀 여섯 가마를 바치는 자에게 팔도록 할 것이다.
 - 「숙종실록」 -

- ① 평민이나 천민들이 자동적으로 향안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다.
- ② 국가재정이 어렵거나 군량이 부족할 때, 또는 구휼을 위해 남발되었다.

- ③ 조선 시대에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임명장이다.
- ④ 임진왜란 때 처음 나타났는데, 전공을 세운 사람 또는 납속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25. 다음 보기의 (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을(를) 하면 파종하는 것에 비해 힘이 5분의 4가 적게 든다. 그러므로 일할 사람이 많으면 한없이 경작할 수 있고, 땅이 없는 자는 빌려서 농사지을 수도 없다.

- ① 못자리에서 일정기간 모를 키우다 논에 옮겨 심는 것이다.
- ② 규칙적으로 모를 옮겨심기 때문에 잡초 제거에 유리하였다.
- ③ 조선 초기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조선 후기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④ 모를 옮겨심기 전까지 쉬고 있는 논에 보리를 심어 벼·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여 수확량이 늘어났다.

26. 다음 보기의 주장을 한 사람이 옳게 연결된 것은?

가.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負)를 1호의 영업전으로 한다. 그러나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이지 않고 미치지 못하는 자도 더 주지 않으며,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천백 결이라도 허락해 주고,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는 다만 영업전 몇 부 이외에는 허락한다.

나. 무릇 1여의 토지는 1여의 인민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한다. ...(중략)...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가을이 되면 오곡의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에 가져온 다음에 분배한다. 이 때, 국가에 바치는 세를 먼저 제하고, 다음에는 여장의 봉급을 제하며,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장부에 의거하여 노동 일수에 따라 여민에게 분배한다.

- | | |
|-----------|---------|
| ① 가 - 이익 | 나 - 정약용 |
| ② 가 - 유형원 | 나 - 이익 |
| ③ 가 - 박지원 | 나 - 유형원 |
| ④ 가 - 정약용 | 나 - 유형원 |

27. 다음 사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람이 곧 하늘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마음대로 귀천을 나눔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 도인은 차별을 없애고 선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가. 19세기 사회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제우에 의해 창시되었다.
 나. 최제우는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펴내 교리를 정리하였다.
 다. 서양과 일본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한다는 반외세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라. 안정복이 이 사상을 비판하는 「천학문답」을 저술하였다.
 마. 정부는 사교로 규정하고 순조 즉위 후 대탄압을 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다음 보기의 내용이 발표되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황조가 우리 왕조를 세우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지도 503년이 되는데 짐의 대에 와서 시운(時運)이 크게 변하고 문화가 개화하였으며 우방이 진심으로 도와주고 조정의 의견이 일치되어 오직 자주독립을 해야 우리나라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략)... 짐은 이에 14개 조목의 큰 규범을 하늘에 있는 우리 조종의 신령 앞에 고하면서 조종이 남긴 업적을 우러러 능히 공적을 이룩하고 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니 밝은 신령은 굽어 살피시기 바랍니다.

- ① 지방 제도는 8도의 행정구역을 23부로 개편하였다.
- ②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교육을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으로 나누었다.
- ③ 지방재판소, 한성재판소, 고등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하였다.
- ④ 정치부문에서는 의정부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도입하였으며, 8개 아문을 7부로 바꾸었다.

29. 학교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1894년 갑오개혁에 따라 소학교령이 공포되었다.
- ② 1906년 보통학교령이 공포되어 소학교가 보통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 ③ 1941년 국민학교령에 의해 황국신민을 양성하기 위한 국민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 ④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1995년 교육법 개정으로 1996년 3월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30. 다음 보기의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

가. 육군 1대대를 존치하여 황궁 수위를 담당하게 하고 기타를 해산할 것.
 나. 대한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을 것.
 다.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에 초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것.
 라.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한다. 일본제국 정부는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형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나 → 다 → 가 → 라
- ③ 다 → 라 → 나 → 가
- ④ 라 → 다 → 나 → 가

31. 다음 보기의 단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운동이 개시된 것은 또한 이미 오래이다. 그러나 회고하여 보면 여성운동은 거의 분산되어 있었다. 그것에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목표와 지도 정신도 없었다. ... (중략) ... 우리는 운동상 실천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으니 우리가 실지로 우리 자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분투하려면 우리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운동을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 ① 해외동포의 구호와 지방의 수재민 구호를 위한 모금 운동 등을 하였다.
- ②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학 사건 등 사회운동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 ③ ‘여권통문’을 발표하고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해 여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부인강좌와 순회강연, 야학 운동 등으로 문맹을 퇴치하고 남녀 평등 의식을 깨우치게 하였다.

32. 다음 보기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옳은 것은?

한국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한국으로 침입하는 것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일본이 지명하는 독립운동가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 ① 치안유지법
- ② 미쓰야 협정
- ③ 경찰범처벌규칙
- ④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33. 다음 보기의 (가), (나), (다)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한국 독립군	조선 혁명군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관련 전투	(가)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영릉가 전투 (나)	호가장 전투 (다)

- ① (가) 청산리 전투 (나) 쌍성보 전투 (다) 홍경성 전투
- ② (가) 쌍성보 전투 (나) 홍경성 전투 (다) 반소탕전
- ③ (가) 봉오동 전투 (나) 반소탕전 (다) 쌍성보 전투
- ④ (가) 홍경성 전투 (나) 쌍성보 전투 (다) 반소탕전

34. 다음 보기의 내용을 발언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릴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다.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이다.

- ①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였다.
- ② 송진우 등과 함께 한국민주당을 결성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지를 선언하였다.

- ③ 해방 직후 조선총독부로부터 치안권을 인수하여 안재홍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④ 남한만의 단독선거 실시에 반대하여 북한 지도자들과 통일 정부 수립을 논의하고자 남북협상에 참여하였다.

35. 다음 보기의 시기에 통과된 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임기는 2년이었으며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여 정부 수립의 기틀을 만들었다.

- ① 농지개혁법
- ② 귀속재산처리법
- ③ 제주 4·3 특별법
- ④ 반민족행위처벌법

36. 다음 보기의 (가)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6.25 전쟁 발발	휴전협정 조인
	(가)

- ① 대전협정
- ② 부산정치파동
- ③ 반공포로 석방
- ④ 한미상호방위조약

37. 다음의 조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양 체약 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 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① 학생과 시민은 6·3시위로 불리는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회복하였다.
- ③ 조약의 제2조에 대해 한국과 북한, 일본이 협의 끝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④ 한일협정문은 한국과 일본 간의 ‘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38. 다음 중 제3공화국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향토예비군을 설치하였다.
- ② 학도호국단이 부활되었다.
- ③ 국민교육헌장을 반포하였다.
- ④ 가정의례준칙을 고시하였다.

39. 다음 제4공화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다.
- ②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며,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③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헌법위원회 위원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하였다.

40. 다음 보기의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나) 첫째,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해 대통령선거로 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 ㄱ. 언론자유수호선언
- 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ㄷ. 민주화추진협의회 조직
- ㄹ.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선출
- ㅁ.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발기인대회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 ②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지’에 블로그 등의 운영자가 그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사이트의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2. 고의와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 ②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는 목적범 규정으로서,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한다.
- ③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 혹은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
- ④ 미필적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삼아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3.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
- ②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 ③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에 정지해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 ④ 내과 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와 협진 결과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진료 경과에 비추어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자 이를 신뢰하여 내과 영역의 진료를 계속하다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내과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
- ② 결과적 가중범은 과실로 인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형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 ④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5.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A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에 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면 甲의 범행과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② 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 담당의사 甲의 과실이 있어 A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 A가 甲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사실은 A의 사망과 甲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한다.
- ③ 甲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넌 보행자 A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A와 동행하던 B가 밀려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甲의 업무상 과실과 B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④ 한의사인 甲이 A를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 시술을 하였는데 A가 시술 후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A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6.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방송기자가 방송프로그램에서 약 8년 전에 이루어진 사적 대화의 불법녹음을 대화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까지 공개한 것은, 그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구조조정의 실시가 필연적으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기 위하여 진행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다. 1년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이 사회의 결의 및 시장변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 행한 변영회장의 단전조치는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라.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를 하지 않고 쟁의를 한 경우에는 신고절차의 미준수로 인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 마.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고 이를 재건축사업에 제공하여 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의 판결을 받아 건물을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자신의 아버지 乙에게서 乙 소유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乙이 사망하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乙이 甲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경우, 사망한 명의자 乙의 승낙이 추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②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게 된 甲이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甲의 어깨를 잡자, 甲이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③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될 수 있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법익이 침해된 이후의 사후 승낙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

8.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의사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없다.
- 나.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강제하는 법률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또 간행물이 발행될 당시뿐만 아니라 그 발행이 중단되고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바 없었다면, 자신의 간행물 발행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다. 甲이 변리사로부터 받은 A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답과 감정결과 통보, 특허청의 상표출원등록 등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라. 사립학교 운영자 甲이 A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수회에 걸쳐 B외국인학교에 대여하는 과정에서 관할청의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A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B학교에 대한 자금대여 안건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대여행위가 법률상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그와 같은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① 가(X) 나(O) 다(X) 라(X) ② 가(O) 나(O) 다(X) 라(X)
- ③ 가(X) 나(X) 다(O) 라(X) ④ 가(X) 나(X) 다(X) 라(O)

9.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 ③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
- ④ 교수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입학전형시험 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수험생 등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알게 된 위 수험생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 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면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0. 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족의 명예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 ② 「형법」 제12조가 말하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 ③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면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인 명령에 따르는 행위라도 이는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④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어떤 사람의 성장 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1.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자의로 인한 중지미수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한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 ③ 불능범의 판단기준인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판단으로 볼 때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 ④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12. 실행의 착수 또는 기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 해의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지원금 지원결정의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②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
- ③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 ④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소송을 제기한 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13. 범죄 실현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④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준비행위는 단순한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도 인정된다.

14. 교사와 방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간호보조원이 무면허 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의사가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종료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의사는 무면허 진료행위의 방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나.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다. 甲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자 동거하던 동생 乙을 경찰서에 대신 출석시키고 자신을 위하여 허위자백을 하게 한 경우, 甲에게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 라. 백화점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속 판매되도록 방치한 행위는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행위를 방조한 것에 해당한다.
- 마. 甲이 고발을 당하자 乙에게 증거를 변조하도록 교사하였는데 乙이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형사사건의 증거를 변조한 것에 대하여 乙이 증거변조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甲도 증거변조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공동정범과 합동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②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면서 종전에 이루어진 범행을 알았다면, 가담 이후의 범행은 물론 전체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 ③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

- ④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16. 직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②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③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④ 건물제공행위와 성매매알선행위의 경우 성매매알선행위가 건물제공행위의 결과에 해당하고 반대로 건물제공행위는 성매매알선행위에 수반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 않고 위 각 행위를 통틀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행위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17.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직선거법」 제106호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호별방문죄는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이라는 단일한 범의 하에 수인의 집을 방문한 경우 시간적 근접성 및 연속성에 대한 판단 없이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②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③ 같은 심급에서 1회 선서한 이후 그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 ④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된 경우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 침해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

18.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주식회사의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경우, 수수료에 대한 권리는 甲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②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추징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

- ③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되므로,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 ④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를 실시하여 압수해 온 물건을 몰수하였다면, 해당 몰수는 위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19.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의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벌금의 경우에는 벌금액을 정해야 하지만 환형유치처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
- ③ 「형법」 제62조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 ④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므로 선고유예 결정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0. 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기죄에서의 ‘계약상 의무’는 반드시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 의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주의와 배려라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강간치상죄만 성립하고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 의무도 포함되며,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와 객관적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보호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④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협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유기죄로 가중처벌된다.

21. 약취와 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형법」은 추행·간음·영리목적의 약취·유인과 결혼목적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 나. 「형법」상 약취·유인의 죄는 모두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목적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 다.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라. 미성년자약취·유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다음 사례(가~라)와 그에 대한 죄책(㉠~㉣)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
- 나. 강간범이 강간행위가 종료한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 다. 강간범이 강간 실행행위의 계속중에 강도행위를 하고,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여 종료한 경우
- 라.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으며, 이 과정에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 | | |
|---------|---------|-----------|
| ㉠ 강도죄 | ㉡ 강간죄 | ㉢ 강도강간죄 |
| ㉣ 강도미수죄 | ㉤ 강간미수죄 | ㉥ 강도강간미수죄 |
| ㉦ 강도치상죄 | ㉧ 강간치상죄 | |
| ㉨ 경합범 | ㉩ 상상적경합 | |

- | | | | | |
|---|-----|-----|-----|-----|
| | 가 | 나 | 다 | 라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23.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신분 관계가 있는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친족상도례 규정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고, 의사자유 침해의 성격을 가진 강도의 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 범죄에 준용된다.
- ③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 편취의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 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④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앞에서 언급된 ‘배우자’와의 관계로 볼 때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24. 다음 사례 중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A)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B)를 옳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경우
- 나.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에서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말한 경우

- 다.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인터넷 구직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한 경우
- 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
- 마. 노동조합 사무장인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인 회사 부사장에게 “야 ○○아,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 반말로 여러 차례 이름을 부른 경우

- | | | | | |
|---|---------|------|---|--------------|
| | A | B | A | B |
| ① | 가, 다, 마 | 나, 라 | ② | 가, 라, 마 나, 다 |
| ③ | 나, 다, 라 | 가, 마 | ④ | 다, 라, 마 가, 나 |

25.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체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6.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이른바 ‘착오송금’의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만약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나.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다. 다만, 판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었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계좌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자신이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으로서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라. 한편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닐뿐더러,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하는 것은 그 범행으로 송금·이체된 돈을 사기범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기 때문이다.

- ① 가, 나 ② 가, 나,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27.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산지기로서 종종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라고 하여도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가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 ②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임차인에게는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③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타인이 권원 없이 자신의 토지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토지소유자가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 ④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하였으나 검사가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만 상습절도 등의 죄로 기소하였다면,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 죄의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28. 신용카드범죄의 사례(가~라)와 그에 대한 죄책(㉠~㉣)이 옳게 연결된 것은? (특별법 부분은 제외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강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나. 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라. 대금결제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신용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 ㉠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 공갈죄

-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29.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② 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③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후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여서 그 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무효라면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도 해당 대표이사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0.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넌 것은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
- ③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제3자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장물죄의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의 규정에 좇아 정하여지는 준거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1. 통화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 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통화위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가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④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32.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②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이미지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3.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법」은 방화죄의 객체를 소유권 귀속에 따라 자기소유물과 타인소유물 및 무주물로 구분하고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다.
 나. 「형법」 제13장(방화와 실화의 죄)은 구체적 위험범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위험의 내용으로는 ‘공공의 위험’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는 모두 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위험의 발생은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라. 구체적 위험범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에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가 되며, 「형법」 제13장에 규정된 구체적 위험범들은 모두 미수범 규정을 두고 있다.
 마. 연소죄는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타인소유물 또는 현주건조물 등의 소훼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4. 다음 사례 중 공연음란죄의 성립이 인정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가 드러날 만큼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들이밀며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라고 말한 경우
 나. 다수인이 통행하는 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한 쪽 방향으로 걸어다가 돌아서서 걷기도 하는 등 주위를 서성인 경우

다.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관객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관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경우
 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피해자(여, 11세)와 단둘이 탄 다음 신체접촉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에게 다가간 경우
 마.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 ① 가, 나, 마 ② 가, 다, 라 ③ 나, 다, 마 ④ 나, 다, 라

35.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 ②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 ③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과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으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④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행위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전자만 성립하고 후자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6.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뇌물에 해당한다.
- ③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였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재직 중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7. 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 나.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는 데 그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폭행사건 현장의 참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라.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범이 아닐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그 사람이 구속됨으로써 실제 범인이 용이하게 도피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참고인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다.
- 마.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마 ③ 가, 라, 마 ④ 나, 라, 마

38.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 등 죄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에는 국가의 징계사건은 물론 사인 간의 징계사건도 포함된다.
- 나.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 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지만, 이후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 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라. 「형법」 제155조 제3항의 모해목적 증거인멸 등 죄에서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9. 다음 사례 중 형의 임의적 감경·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
- 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
- 다.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 라. 미성년자약취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된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 마.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

① 가, 다 ② 가, 나, 다 ③ 가, 다, 마 ④ 나, 라, 마

40. 「형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 ② 중체포·감금죄(「형법」 제277조)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결과적 가중범이자 구체적 위험범이다.
- ③ 준사기죄(「형법」 제348조)는 미성년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 ④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형법」 제364조)는 ‘업무’가 신분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로서, 업무자의 신분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다.